

배포 일시	2022. 12. 29.(목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철 (044-201-4990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... 민·관이 머리 맞댄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·관 협의체를 구성하고,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민·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, 연구원,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·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었다.
- 앞으로 민·관 협의체는 건설인력, 건설기계,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,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,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,
 - 이를 통해,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꼼꼼히,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 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,
 - 그 동안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.

- 한편,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*에 대해서도 지적하며,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.

* 사례 : 1개 현장에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, 월 1,500여만원 지급

- 또한,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.

-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한국레미콘공업협회,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.

-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‘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’(가칭, 이하 ‘신고센터’)도 설치하기로 하였다.

-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에 설치되는 ‘신고센터’에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.

- 실태조사 또는 ‘신고센터’ 접수 결과,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.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“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”라며,

- “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하여 시공사,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참고

노조 전임비 지급 사례

□ 부울경 철콘 1개 현장에서 노조전임비 지급현황

순서	명칭	지역	위원장	지부장	노조전임비	요구기간
계					월 1,558.5만원	-
1	**** **산업	부울경 본부	***	***	4공수×235,000 (월 94만원)	38층 이하 1년+α
2	**** **연합	부울경 본부	***	*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0개월
3	***** **조합	부울경 지부	***	*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3개월
4	****산업	부울경 본부	***	*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0개월
5	***** 조합	부울경 본부	***	***	5공수×280,000 (월 140만원)	10개월
6	** **건설	본부	***	-	3공수×215,000 (월 64.5만원)	6개월
7	** ****연대	부울경 지부	-	*** 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3개월
8	*****연합	부울경 지부	-	*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6개월
9	** ****산업	-	***	*** 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6개월
10	***** 조합	부울경 지부	***	***	6공수×300,000 (월 180만원)	16개월